

금남로에서



정 후 식
논설실장·이사

6월 항쟁 30주년이었던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직격 최루탄을 맞고 숨진 화순 출신 이한열 피격 사건을 파고든다. 두 열사가 쓰러진 6개월 동안 조작되고 은폐된 국가 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기를 발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정권 유지를 위해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공권력의 추악함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책상을 ‘탁’ 치니 ‘악’ 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황당만 발표는 사건 당시부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차갑게 얼어붙은 강물에 아들의 유골을 뿌리며 “잘 가그래이! 철야!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라고 울음을 삼키는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는 항쟁의 현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뜨거웠던 그해 6월을 스크린으로 다시 만나면서 새삼 실감한 것은 역사의 물줄기가 어느 한두 사람에게 의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경찰과 권력 수뇌부에 맞서 시신 부검을 강행하는 검사, 물고문의 단서를 드러내는 부검의 증언, 서울 퍼런 보도지침에도 끈질긴 취재 끝에 진실을 보도한 기자, 위협을 무릅쓰고 수감된 재야인사의 옥중 서신을 밖으로 전달하는 교도관... 양심을

대통령의 나라, 국민의 나라

건 개개인의 행동은 톨나바퀴처럼 맞물려 불의에 항거하는 광장의 합성으로 분출한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해 6월은 엉뚱하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수명 다한 87년 헌법 체제

항쟁 기간 서울 명동성당과 광주 금남로 등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진 대표적인 구호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 정취’였다. 전국 33개 도시에서 하루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결국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를 통해 6·29선언을 내놓는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 이양, 김대중 사면 복권과 시국 사법 석방, 언론기본법 폐지,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 실시 등 8개항이 그것이다.

특히 1972년 유신 헌법 이후 15년 만에 부활된 대통령 직선제는 시민 항쟁으로 권력 구조를 바뀌낸 혁명적 변화였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개헌은 민주 항쟁의 결과물이었음에도 태생적 한계가 분명했다. 1노(노태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측 대리인들로 꾸려진 ‘8인 정치회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는 명분이 컸지만 대권을 노리는 인사들이 주도하다 보니 대통령 권한이 축소된 실정이다. 결국 5년 단임으로 합의의 뜻을 봤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패상’ 됐다. 6월 항쟁 기간 시민들이 요구했던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87년 체제’의 한계로 가장 먼저 꼽히

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3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부와 입법부를 압도하다 보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행정부 내에서도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쏠려 장관이 할 일을 대통령이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까지 특세한다.

9차 개헌 이후 6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집권 후반부엔 어김없이 권력형 비리가 터지고 이들이 모두 잇따라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폐해는 국정 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경구처럼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유화할 경우 그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승자 독식의 선거 구조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체제는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에서 정치권은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 권력을 잡기 위해 사생결단식 갈등과 대치를 일삼아 불신을 자초했다.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지방 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이 대부분 중앙 정부에 집중된 중앙 집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재정과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국책 사업이나 정부 공모 사업에 목을 맨다. 지역의 경제 구조나 특성을 고려한 발전 전략 설계는 언급생생이다. 과도 균형 발전도 공염불이다. 개발 독재의 산물인 수도권 집중의 고착화는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방 정부와 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며 지방 분권 개헌

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여기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체계를 재설계하는 개헌안의 고갱이는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가 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조정,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 재정립,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의 주체인 국회가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가동된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시기부터 정부 형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개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당 이기주의의 탓이다.

분권과 협치가 시대정신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등 주요 후보들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처려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민의 70~80%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 헌법 마련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30년 만에 맞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3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당리당리야나 정치 공학을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 적폐 청산과 국민 주권 시대, 국가대개조의 제도적 완성= 촛불 민심이 국회에 부여한 시대적 의무다.

은폐칼럼

무협 소설과 기업가 정신

했다. 그러던 그가 알리바바 창업 8년 만에 중국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석권했다. 2014년에는 알리바바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중국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중국의 빌 게이츠’ ‘중국 인터넷의 왕’ ‘Crazy Jack Ma’로 불리온다. 무슨 일을 벌였기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삼인방을 BAT라고 부른다. 바로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를 가리키는 말이다. 언론들은 자연스럽게 BAT 세 인터넷 기업의 포지션을 정하고 있다. 기술력은 바이두가 가장 막강하고, 상품력은 텐센트가 강하며, 알리바바는 전략에 강하다는 견해다. 바이두의 창업자 리엔홍과 텐센트의 창업자 마화팅은 IT 분야 전문가이다. 스스로 밝혔듯이 마윈은 IT 분야 문외한이다.

“무협 소설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탐미한 것이 나에게 사유의 날개를 달아줬다.” 마윈의 말이다. 그는 알리바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 무협 문화와 중국 고전에서 찾아낸 아이디어를 심본 활용했다. ‘서호논검(西湖論劍)’

은 무협 문화를 이용한 신의 한 수였고, 기업 문화 전략에도 ‘독고구검(獨孤九劍)’, ‘육맥신검(六脈神劍)’과 같은 무공 이름을 붙여 활용했다. 또한 자신의 닉네임을 진용의 무협소설 ‘소오강호(笑傲江湖)’에 나오는 고수인 ‘풍청양(風清揚)’으로 짓고, 다른 직원들도 무협 소설에서 찾도록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집 무실과 회의실을 소설 속의 ‘도화도(桃花島)’와 ‘광명정(光明頂)’으로, 다른 공간도 달마원(達摩院), 나한당(羅漢堂), 협객도(俠客島)와 같은 무림의 이름들로 명명했다.

무협 소설은 중국의 대중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윈이 존경하는 작가 진용은 중국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통속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대우를 받고 있는, 북경대 등의 대학에서는 ‘김학(金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소설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진용은 모두 15편의 무협소설을 집필하였는데 대표작인 작품으로 소오강호, 신조협려, 사조영웅전, 의천도룡기, 천룡팔부 등이 있다.

마윈은 끊임없는 도전과 기업가 정신으로 극적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비전과 사명감 그리고 협력의 기개를 중시했다. 사명감을 기술이나 자본보다도 우위에 뒀다. 삼장법사 리더십을 최고의 리더십으로 삼은 것과도 연결된다. 특별한 재능이 없었던 삼장법사는 불경을 구하겠다고 목표만을 누구보다도 투철했다. 그런 사명감을 가졌기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효과적인 팀워크를 이룰 수 있었다. 마윈 주위에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무명이었던 초창기 시절, 마윈이 자신의 인터넷 사업을 소개할 때 오픈먼트를 늘 쓰던 말이 이것이었다.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는 인터넷이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수 많은 중국 청년들은 ‘제2의 마윈’을 꿈꾸며 창업 전선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창업 생태계는 마치 않아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창업 열풍이 일게 한 원인 중의 하나가 마윈을 비롯한 롤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기 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이제 희망을 향해 달리자

로 길고 긴 속고와 공론화를 거쳐 왔다.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다각적인 토의를 거쳐서 과정에서 2호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보다 단단하게 다져졌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주의 새로운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야 할 도약의 첫 발을 디딘 준비가 된 것이다.

도시철도에 40여년간 몸담은 입장에서 볼 때, 2호선의 조속한 건설이야말로 명실공히 광주 발전의 핵심키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시는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에 따라 도심 교통 혼잡 구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도시의 팽창에 따른 신규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도시철도는 이동시간 단축과 도로 교통 혼잡도 해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일 뿐만 아니라 도시 균형 발전에도 큰 몫을 해낸다. 공간의 단절이라는 벽을 깨고, 중심지와 부도심의 격차 없이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를 전파하며 고른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는 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월덕점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정으로 돌아오는 총 41.9Km의 순환선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우선 서구 금호지구 방면 일부 구간부터 착공해 서구 유촌동에서 광주역까지 1단계 구간을 2023년에 개통하도록 계획돼 있다. 또한 2구간, 3구간도 차례로 공사에 돌입 2025년에는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총 44개의 역이 세워지고 차량기지과 주차기지가 각각 1개씩 들어선다.

2호선이 개통되면 수혜 인구가 광주 인구의 71%까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도시철도 이용 접근권이 향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 역시 현재의 4배 가량인 12.07%로 올라감과 동시에, 광주 전역을 순환하는 교통망의 탄생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특히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간 1800억 원의 교통 혼잡 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바야흐로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시민의 삶의 수준이 바뀌는 분수령에 서게 되는 것이다.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운영에 대비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광주 발전의 디딤돌이자 시민의 자존심이라는 신념으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뤘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호선을 운영한 14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건설 사업에 반영, 최고의 2호선을 운영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시민의 더 행복한 내일,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희망의 길을 펼쳐고 있는 것이다.

새 날이 비쳐온다. 하얀 눈처럼 정갈하게 씻어낸 새로운 꿈이 시민들의 가슴마다 곱게 내려앉기를 바란다. 도시철도 2호선의 성공적인 착공과 함께 새로운 꿈과 미래를 품은 광주가 그려지리라. 올 한해 광주 전역에서 희망과 설렘의 흥겨움이 노래처럼 쏟아지기를 기대한다. 시민의 행복한 삶에 광주도시철도가 벗처럼 가족처럼 자리하겠다. 광주 시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社 說

남북대화 이산가족 상봉의 마중물 되어야

우리 정부가 다가오는 설을 계기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6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실향민 1세대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매년 3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기초 발언을 통해 “2월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적심자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측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수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했을 뿐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2015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아직 남북의 합의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에 금

강산 관광 재개 등의 조건을 건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 1988년 등록 당시 13만 명이 넘었지만 이 가운데 7만2000여 명이 세상을 떠났고 현재 5만9000여명만 생존해 있다.

또 생존자 가운데 60%가 80세 이상 고령이어서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상봉 신청자도 1372명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900여 명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10월까지 20차례 열린 상봉 행사에선 고작 4185건만 성사돼 “로또 복권 당첨보다 힘든 것 같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이들의 환고 아픔을 감안한다면 남북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설만이 아니라 정례적인 상봉을 모색하고, 화상 상봉이나 서신 교환, 생사 확인 등 낮은 수준의 상봉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형 독감 기승, 위생 수칙 철저히 지켜야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광주 등 지역에 따라서는 한 달 새 환자가 10배 이상 늘 정도로 독감(인플루엔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 지역 내과와 종합병원은 이른 시각부터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독감 환자가 많다 보니 자연히 폐렴으로 입원하는 영유아나 노인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겨울은 예년과 달리 A형,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A형에 걸려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B형에 다시 걸리는 경우도 있어 예방 접종 효과에 대한 불신마저 커지고 있다. 이는 A형 독감 유증자 몇 년 후 수 많은 중국 청년들은 ‘제2의 마윈’을 꿈꾸며 창업 전선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창업 생태계는 마치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창업 열풍이 일게 한 원인 중의 하나가 마윈을 비롯한 롤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독감은 일반적으로 12~1월에는 A

형, 2~3월에는 B형이 유행하지만 이번에는 B형 비율이 오히려 A형보다 높다. 이는 보건 당국이 이번 겨울에 A형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해 준비한 3가 백신이 B형(빅토리아, 야마가타) 바이러스 중 ‘야마가타’를 예방하지 못하면 서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독감이 걸린 이유이다. A·B형 두 유형을 모두 예방하는 4가 백신이 있긴 하지만 비싼 가격이 서민들에겐 부담이 된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다르게 증상이 아주 심하다. 영유아·임신부·고령층 등 노약자는 합병증(폐렴 등)이 생길 수 있어 치명적이다.

독감은 4월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는 게 좋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 독감도 위생 수칙을 지키는 등 예방이 최선이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독감이 의심스러운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無 等 鼓	
<p>올해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그런데 신년부터 지역 정치인들의 자질(資質)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자질은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 또는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를 일컫는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덕목·실력, 아울러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p> <p>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및 전남 회 주 당직자와 출마 예정자들이 신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자리에서 일부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 뒤</p>	<p>그러면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부 주요 당직자와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의 속살을 보는 듯 안타깝다며 골품의 높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5·18 민주묘지는 어느 누구도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참배해야 하는 묘역이기 때문이다. 정치 행사 등은 묘역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이뤄지는 게 기본인 것이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의 자리를 맞아 국회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자리에서 일부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 뒤</p> <p>이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당직자들의 이 같은 행동은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p> <p>자신의 ‘출세’를 위해 선거권을 생각하는 1차적으로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꼼꼼히 걸러야 한다. 전문성은 차지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질과 기본적인 소양(素養)도 없이 현재과 공통의 높은 인기를 등에 업고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최권일 정치부부장 cki@</p>
자질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